

여야, 명운 건 선거전... 지지층 결집 총력전

내달 5-6일 사전투표 '1차 분수령'... '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여론조사, 정부견제 > 정부지원... 의정갈등·투표율·막말 변수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운을 건 여야의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31일 기준 254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듯한 흐름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46명)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조국혁신당이 3파전 양상을 보인다.

남은 기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 전개와 막말 논란 등이 막판 변수로 꼽힌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전체 투표율도 승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은 이번 총선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정권 심판'으로 각각 규정하며 건곤일척 대결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조 심판이 민생"이라며 "범죄자 세력이 선풍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

여당은 동시에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퇴, 의제 제한 없는 의정 대회를 대통령실에 건의하는 등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고려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가공식품 등의 부가세 한시 감면 등을 추진하며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종섭·황상무' 이슈에 이어 '대과 발언' 논란 등으로 정권 심판민심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정권 심판론에 더욱 불을 지필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을 주권자가 심판할 때가 됐다"며 "정부 심판에 대한 한국 정당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심판론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말 한마디에 자칫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경계심에 '야권 200석' 같은 낙관론이나 '설화' 차단에도 애쓰고 있다.

양당 모두 '원내 1당'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지역구 254석 중 국민의힘은 80곳 안팎, 민주당은 110곳 이상을 현재 우세 지역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가정으로 전달되는 선거 공보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열흘 앞둔 31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다세대주택 주변에 투표 안내문·선거 공보물이 꽂혀 있다. /김애리 기자

국민의힘은 목표 의석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과반(151석) 의석이 목표다.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에 앞서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전화 조사원 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0%,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였다. 나머지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1차 분수령이 될 사전투표(5-6일)는 당장 다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 선거에 2개 정당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이 254곳 전 지역구에, 민주당은 246곳에 후보를 냈다. 녹색정의당은 17명, 개혁신당 43명, 새로운미래는 28명의 지역구 후보를 등록했다. 무소속 출마자는 58명이다.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총선에는 38개 정당이 23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거대 양당은 선거법상 금지 규정을 피해 가며 비례정당과 '한 몸 선거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와 함께 "국민만 보고 찍으세요" 선거운동을 펼치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연합과 '더불어 불쌍' 구호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현 의석 6석 유지를 목표로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의원을 중심으로 노동·성평등·소수자 등을

지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투표율이 55%를 넘지 않으면 보수 정당에, 60%를 넘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한 경향을 보인다.

◇ 여야 모두 '막말 경계령'...전체 표심 악영향 미칠 돌발 변수 최근 불거진 일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도 표심을 흔드는 나비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주당 양면석 후보(안산갑)는 20대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했고, 같은 당 공영은 후보(화성울)는 현대차그룹 임원 재직 시절 서울 성수동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군 북부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선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늘었고,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작년 퇴직 후 변호사로 단기간에 업체 변론을 맡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거액 수입' 논란이 불거졌다.

상호 너거티브 공방이 격해지면서 자칫 선을 넘는 말실수도 돌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막말은 선거 결과의 키를 쥔 중도층 표심을 떠나게 하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여러 차례 후보들에게 경계령을 내린 상태다. /연합뉴스

충선 유권자 4천425만명...50대 이상 51.5%

선거인명부 확정...40·50대 37.4% > 20·30대 28.6%

오는 '4·10 총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중 50대 이상 비율이 전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이달 29일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포함, 총 4천425만1천919명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중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천424만5천522명이고,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6천367명이다.

비례대표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외국민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수는 지난 제21대 총선 때(4천399만4천247명)보다 25만7천672명 늘어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천191만8천685명(49.53%), 여성은 2천233만3천234명(50.47%)으로 여성 유권자가 41만4천549명 더 많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천411만53명(31.89%), 50대 871만1천608명(19.69%), 40대 785만7천539명(17.76%), 30대 655만9천220명(14.82%), 20대 611만8천40

7명(13.82%), 10대(18-19세) 89만5천92명(2.02%)이다.

5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 51.58%다. 40·50대 비율은 37.45%로, 20·30대 28.64%보다 8.81%포인트 더 많다.

17개 시·도 중엔 경기도가 1천150만1천379명(26.19%)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특별시 8천300만840명(18.76%), 부산광역시 288만2천847명(6.51%) 순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30만1천262명(0.68%)으로 가장 적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는 총 45개(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개)다.

기초단체장 선거인 수는 28만7천88명, 광역의원 선거인 수는 84만6천643명, 기초의원 선거인 수는 112만3천151명이다.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5-6일 사전투표소, 또는 4월 10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

투표율·의정갈등 등 판세 영향 미칠 남은 변수는

'의정 갈등 장기화' 興에 부담...투표율은 60%가 분수령 될 듯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10 총선을 열흘 앞둔 현재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우세를 점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그만 변수에도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전례를 고려하면 선거판을 바꿀 만한 요인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투표율, 부동산 등재 문제 등 둘러싼 일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과 유세 과정에서 불거지는 돌출성 막말 등이 변수로 지목된다.

◇ 의정 갈등 해결되면 興에는 확실한 호재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대형 병원의 진료 공백 문제는 여론이 총선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자기 대의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은 여론에 악재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의료 개혁이라는 명분과 별개로 의료계 집단행동이나 진료 파행의 장기화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되는 탓이다. 남은 열흘간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론은 헨디캡을 안고 총선 성적표를 받아야 할 확률이 낮지 않다.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한 여론의 반감도 크지만, 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4월10일까지 촉박한 시간 안에 완벽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의정 갈등의 출구라도 찾는다면 여론에는 호재라는 데에도 이견이 없어 보인다. ◇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부동산 여야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판세에 따르면 지역구 254곳 중 현재 어느 당의 우세로 볼 수 없는 경합 지역이 여전히 60-70석에 달한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중원인 충청권, 보수 'ढাঁ' 부산·경남(PK) 등 전국 각지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지역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수천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박빙 지역에서는 이 부동층이 어느 쪽으로 기울

느냐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꾸준히 20% 안팎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사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응답률 15.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정당 지지도 항목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0%,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한 응답은 50%였다.

◇ '높은 투표율, 진보 정당에 유리' 통할까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통설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집권 여당이 불리하다는 속설도 있다. 다만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 투표율까지 세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어떤 유형의 유권자가 투표장에 많이 나왔는

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투표율이 55%를 넘지 않으면 보수 정당에, 60%를 넘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한 경향을 보인다.

◇ 여야 모두 '막말 경계령'...전체 표심 악영향 미칠 돌발 변수 최근 불거진 일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도 표심을 흔드는 나비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주당 양면석 후보(안산갑)는 20대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했고, 같은 당 공영은 후보(화성울)는 현대차그룹 임원 재직 시절 서울 성수동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군 북부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선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늘었고,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작년 퇴직 후 변호사로 단기간에 업체 변론을 맡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거액 수입' 논란이 불거졌다.

상호 너거티브 공방이 격해지면서 자칫 선을 넘는 말실수도 돌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막말은 선거 결과의 키를 쥔 중도층 표심을 떠나게 하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여러 차례 후보들에게 경계령을 내린 상태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프리즘

민형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후보(광주 광산울)는 중앙과지역 1+1 공약으로 윤석열 독재정권 조기종식과 광주·전남에 너치메가시티 추진을 발표했다.

민 후보의 중앙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주 내용이다.

민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경제 민주주의 평화 등 모든 분야를 과거로 후퇴시켜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



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후보는 "지구는 생태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시민은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모두를 지키겠다"며 "기후 위기도, 일자리 위기도 없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강기자

안도걸 "아이들 보육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울)는 31일 "전날 광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등 민간어린이집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아이들 보육환경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은 원장 교사 겸직 기준 완화와 겸직 해제에 따른 답임교사 인건비 지원, 영아반에 대한 100% 인센티브 지원, 영유아 무상급식·간식비 지원, 안전공제회 적립금을 할



용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안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보육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표준보육비용 단가의 현실화 등 민간어린이집의 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박선강기자

박병석 "광주 빛나는 문화예술벨트 조성"

새로운미래 박병석 국회의원 후보(광주 북구울)는 31일 "운암동에 복합 문화 예술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백남준은 현대 문명의 상징 중의 하나였던 텔레비전을 예술 형식으로 끌어들이며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와 작품을 만들어냈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복합 문화예술벨트는 작가들과 엔지니어들 그리고 기업가들이 분야와 관습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광주비엔날레는 새로운 융복합 예술 콘텐츠로 다시 세계적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번에는 예술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과, 체험형 관광으로까지 관련 영역을 확장해서 기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강기자